이름 : 박정인 학번 : 20151639 학과 : 컴퓨터공학과 분반 :

주제 : 군가산점제도 친/반

주장개요

군 가산점 제도 도입은 너무 과한 보상이다.

군 가산점 제도란 제대 군인에게 공무원 등의 일부 직군의 채용 시험에 응시할 때 일정 부분의 가산점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제대 군인이 공직이나 공기업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해 주는 제도이다**.  
1961년에 도입 되었지만 1999년 12월 23일 헌법 재판소는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현역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폐지 되었다

1. 자신의 주장 논제

세부논제 1 형평성이 옳지 못합니다. 상대적 박탈감

세부논제 2 과한보상은 이미 조직사회나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한것인데 그거 자체가 생활을 한것인데 군대다녀온놈 안뎌녀온놈 여자 일 때 군대 다녀온놈이 빠릿빠릿할꺼라는 인식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가산점을 주는 것은 과하다

세부논제 3 ①기본적인 의무 수행에 대하여 보상이 따를 필요가 없으므로 헌법학적으로 군가산점 제도는 근거가 없음  
  
②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제도임 (군대를 갈 수 없는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므로)

③ 군 가산점을 적용하기 전/후 로 비교해보니 12.9%의 당락이 바뀌었으므로 이것은 불평등함.

④ 제대한 모두가 군 가산점 제도를 원하는 것은 아니므로 불합리하며 또다른 보상 방안도 많음.

⑤ 군대에서도 학업과 경험을 쌓을 수 있음

세부논리 4 직장과 비슷한 가치를 가진 조직사회 군대이다.

사회생활 조직사회를 경험한것인데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과한

**군생활이란것이 하나의 조직생활이고 사회생활이다. 한사람에게있어서 소중한 경험이었을 텐데 이런것들에 가치를 평가하는것은**

**[정문순 칼럼] 제대군인의 박탈감을 여성에게 전가할 이유 없다**

첫째, 의무로 주어지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법은 세상에 있을 수 없다. 군에 안 간 자와 군에 간 자가 차등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병역면제자나 양심의 명령으로 도저히 총을 들 수 없는 이들은 군에 못 간 것이지 일부러 군에 안 간 사람들이 아니다. 정부는 병역기피자와 병역면제자/거부자의 차이를 망각하고 마치 하나인 양 뒤섞어 취급함으로써 가산점을 주장하는 제대군인들의 감정을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부채질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병역기피자로 쉽사리 매도되듯이 군 가산점 논의가 진행되다보면 병역면제자는 어느 순간 병역기피자의 자리로 옮겨져 있다.   
  
둘째, 국방부가 제대 군인들에게 기대고 싶은 건 ‘한’의 정서이다. 힘들게 병역을 치른 제대군인일수록 마음에 쌓인 설움이 많을 것이다. 상병 출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군대를 통해 어떤 어려운 일에도 대처할 수 있는 용기와 자기관리 능력을 키웠다고 회고하면서도 내심 억울함은 어쩔 수 없었는지 군대 가서 ‘썪는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다.   
  
제대군인들의 한(恨)은 빛나는 청춘 시절, 원하지 않는 곳에 끌려가 무의미한 고생만 했다는 박탈감에서 기인한다.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군에서 3년 가까이 복무한 전직 대통령처럼 군에서 보람을 느꼈다고 말할 만한 사람은 흔치 않다. 총을 쏜 일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일 없으며, 총질 못지않게 많이 한 삽질 경험이나 유치한 반공 글짓기 경험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나 청춘의 가슴에 ‘한’을 심어준 건 애초에 그들을 군인으로 끌고 간 정부였다. 병역이란 게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일이라면 정부의 제대군인 ‘한’ 풀기는 병 주고 약 주기다. 그것도 자기 돈도 아닌 남의 돈 털어서 약 주려고 하는 꼴이요, 청춘을 갈취하여 설움을 심어주고 나서 그것을 풀어줄 희생자를 만만한 데서 찾는 격이다.     
  
셋째, 군복을 입은 적이 없다고 해서 공무원 시험을 통과하는 데 진입 장벽을 두는 건, 군대에 다녀와야 진정한 국민의 자격이 있다는 발상에서 기인한다. 군필이 곧장 국민의 지위로 연결되는 건 군부정권 시대에서나 어울리는 발상이다.     
  
넷째, 병역이라고 해서 모두가 군에서 총을 잡는 것은 아니다. 대체복무제의 일환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만 해도 이미 군부 집권기에 태어나 수십 년째 정착해 있다. 이제는 가뭇없이 사라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 부과를 논의하던 시절도 있었다. 단기 군사훈련 기간을 제외하고 군대가 아닌 산업현장에서 돈 벌고 경력 쌓으며 일하는 산업기능요원들이 스스로 군대 다닌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모든 병역이 힘들거나 무의미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이다. 전문 지식이나 제대 후 생계와 연관되거나 취업 준비에 써먹을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한 병역은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물론 숙련된 기능이나 지식이 필요한 카투사, 군의관, 군법무관, 병역특례병 등은 아무한테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번듯한 전문 인력이 아닌 평범한 장삼이사들인 현역 입대자들은 남자 계급 중에서도 중간 이하를 차지할 것이다. 이는 소수자인 여성의 처지와도 만난다. 결국 군 가산점에 집착하는 정부의 태도는 서민 남성들의 소외감을 자신들과 계급적으로 닮아 있는 여성들의 희생을 통해 해소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정부-제대 군인, 병역기피자-병역수행자로 이루어져야 할 대립관계를 군필 남성-여성으로 바꿔치기함으로써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들은 고스란히 빠지게 된다.     
  
여섯째, 가산점으로 인해 혜택을 볼 남성 집단은 어차피 공무원에 응시하는 소수의 사람들에 한한다. 특정 직종에 취업하는 남성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정도로야 제대군인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겠는가? 물론 상징적 의미와 사회적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결론

2. 자신의 주장 논거

세부논거 1 군대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면제자들(병역면제자를 병역기피자처럼 매도하는 비논리)은 그리고

세부논거 2 미리 조직사회를 경험함으로써

세부논거 3

결론

1-2세부 논제 검토

세부논제 1에 대한 예상 반론:

재반론:

세부논제 2에 대한 예상 반론:

재반론:

세부논제 3에 대한 예상 반론:

재반론: